

한국 청소년의 민주주의 문맹 현상

최 현 섭*

- I. 문제의 제기과 논의의 범위
- II. 민주주의 문맹의 개념
- III. 청소년의 민주주의 문맹 현상
- IV. 민주주의 문맹 퇴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I. 문제의 제기과 논의의 범위

청소년 정책을 마련하거나 청소년의 교육 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생활화하도록 하는 문제, 즉 민주시민교육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오랫동안 관심을 끌어온 문제임에 틀림 없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논의들은 대부분 민주적 가치와 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주시민교육은 이완 같은 논리에 충실한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의 가치와 태도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

와 태도가 이미 함양하고자 하는 민주적 가치와 태도와 일치할 수도 있고, 함양하고자 하는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생활화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배치되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태도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를 도외시하고 세운 교수-학습의 설계나 활동들은 그만큼 학습자의 준비상태와 괴리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소년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의 상태에 관한 사실적인 탐구를 소홀히 하여 왔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을 계속하여 왔으며, 각종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제안도 많았다. 이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은 있어 왔지만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적 효과는 그렇게 크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라도 우리는 청소년들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가 어떠한 상태인지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설계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연령에 따른 발달 정도

*강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도 파악하여야 하며, 원리를 아는 것과 실천을 하는 것 사이의 거리도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무엇이 그들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의 발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를 밝혀내야 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 의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의 발달 상태에 관한 사실적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민주 시민교육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청소년들의 가치와 태도의 상태가 민주 시민교육을 통하여 함양되어야 하는 민주 시민성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민주주의 문맹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학교와 학급에서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동안에 보이는 행위의 방식들을 분석하여 그들의 민주주의 문맹 상태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먼저 분석의 지침이 되는 민주주의 문맹의 개념과 상호작용 분석 방법에 관하여 간략하게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문맹 상태를 확인하고, 이어서 이와 같은 민주주의 문맹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적 대안을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II. 민주주의 문맹의 개념

문맹 *illiteracy*이란 개념은 원래 문자를 읽거나 쓰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었다. 그

러나 이 개념은 점차 언어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 기능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이해되고 있다. 그리하여 문맹이란 문자의 쓰기와 읽기를 넘어서서 수의셈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사회 생활에 기본이 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문해교육 *literacy education*이 일상 생활에 기본이 되는 읽기, 쓰기, 셈하기(3'RS)에 익숙하도록 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까닭은 이때문이다¹⁾. 이와 같은 문맹 상태는 개인적으로는 수치일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며, 공적인 생활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져 사회 유지와 통제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때문에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문맹 퇴치는 개인적인 소망을 넘어서서 중요한 사회적 과업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때, 급속한 사회 변동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이 되는 능력과 태도를 구유하지 못한 상태를 문자 문맹과 구별하여 사회적 문맹 *social illiteracy*이라 지칭한다. 이를 좀더 정련하여 규정하면 사회적 문맹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상황과 자신의 위치,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의 참여 방식을 분별하고, 상황과 조건에 적합한 행위를 선택하여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지니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²⁾ 새롭게 나타난 지위에 따른 역할을 구별

1) 문맹과 문해의 개념은 UNESCO가 제2차 세계 대전후 신생국들의 문맹 퇴치 운동을 시도하면서 발간한 보고서의 개념 규정(UNESCO, *World Illiteracy at Mid-Century*, 1957)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밖에 1962년 UNESCO 문맹자교육 전문가회의의 전의문(Peter Du-Sautory; 1966)도 주요 참고 자료가 된다.

2) 최현섭, "한국인의 민주주의 문맹 현상과 민주 시민교육",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 시민교육, 한국미래연구학회 세미나 발표문, 1991, p.54

지어 수행하지 못한다든가, 기본적인 사회 규범도 갖추지 못하고 복합적인 상황에 적합한 가치 선택 능력도 발달되지 못한 상태가 사회적 문맹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민주주의 문맹 *democratic illiteracy*이란 이와 같은 사회적 문맹의 하위 형태에 속한다.³⁾ 주지하다시피, 민주주의는 국가 사회의 체제에 관한 하나의 이념형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지향하는 가치와 사상, 그리고 이에 근거한 정치 사회적인 제도는 다른 이념형과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가치와 사상, 그리고 제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공유한 구성원을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 문맹이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이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능력과 태도를 지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들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준거로 하여, 사회적 상황과 자신의 위치,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의 참여 방식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상황과 조건에 적합한 행위를 선택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이념형을 준거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문맹이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 문맹은 민주주의를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사회에서만 성립되는 개념일 뿐, 다른 것을 이념형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문해 또는 교양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민주주의

문맹이란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민주시민성의 결함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 문맹을 분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성과 그 결함 상태에 대한 세분된 이해가 필요하다. 민주시민성, 즉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녀야 하는 능력과 태도는 어떠한 민주주의 모델을 이념형으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고전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직접민주주의에서 요청되는 제비 뽑는 능력, 뽑힌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다스리는 능력, 그러나, 주어진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다른 제비뽑기를 통하여 권력을 이양하려는 태도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오늘날의 참여민주주의를 이념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적인 일 이전 사회적인 일 이전 자신의 의견과 노력을 보태는 것이 마땅한 의무이며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발견될 때에는 즉각 주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과 태도가 요청된다.⁴⁾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제시하는 민주시민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⁵⁾ 첫째로, 역사적으로 발전된 민주주의 개념의 비교 이해와 그 실현 의지이다. 이때, 발전된 의미의 민주주의란 인간 존엄성이 공정하게 구현되는 국가사회, 다원성의 용인과 공존, 공영의 공동체의 확립을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는 그러한 이상이

3) 최현섭(1991), pp.57-60

4)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이념적 성격의 차이에 관해서는 D. Held, (이정식역) 민주주의의 모델, 인간사랑, 1990, Mcpherson (김규일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 양영각, 1984 참조.

5) 최현섭(1991), 미래의 한국과 세계, pp.35-36, F. Butts, *Civic Mission in Educational Reform for the Public and the Profession*, Hoover Institution Press, 1989, p.282, R.A. Hill, *Conceptualization of Citizen Education*, Research for Basic Schools, Inc., ERIC ED 180, p.20

구현되는 과정과 결과에 다음과 같은 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가 밑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우선 국가사회의 실질적인 주체임을 자각하여야 하고,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능동적인 참여,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과 의사의 관철을 위한 자율적인 조정과 합의, 그리고 그에 대한 자발적인 동조와 결과에 대한 자기책임을 실천적 판단의 기준과 생활 원리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번째의 민주시민성은 주어진 국가사회의 구조와 과정에 관한 비판적인 분석과 반성적인 재조명을 통하여 변화시켜야 할 반민주적, 또는 비민주적인 실체를 분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그러한 민주시민성의 실천을 통하여 국가사회의 구조와 과정의 민주화에 구체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능력과 태도를 갖추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민주주의 문맹은 크게 세 가지의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에 관하여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원초적인 민주주의 문맹과,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상, 또는 제도적 특성에 대하여 알고는 있으나, 상식적이고 사전적인 수준에서만 알 뿐, 역사적으로 변형된 의미와 형태, 다른 이념형과의 차이, 도덕적인 의무감에 근거한 실천의 중요성 등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 부분적 문맹이다. 다음으로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상, 제도적 특성, 그리고 역사적으로 변형된 의미와 형태, 총체적 분석과 도덕적 의무감에 근거한 실천 등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으며, 그에 관한 주장도 할 수 있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부분적 문맹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천적 문맹이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 문맹은 민주주의를 지향

하는 사회의 사회적 문맹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문맹자라도 다른 형태의 사회적 문맹자는 아닐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즉 지방 자치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애경사시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으며, 선거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자식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가족원의 역할, 이웃과의 대화, 친척 관계 등과 같은 사적인 생활에서는 문맹자가 아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문맹자라도 이와 같은 사적인 생활에 큰 불편도 없다. 어떤 때는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눈이 뜨였기 때문에 사적생활이 어색해지거나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다. 정치적 이념이 다른 정당의 공천을 받은 학교 선배가 선거 운동을 부탁하였을 때 겪게 되는 갈등이 그 예이다. 사실 이와 같은 갈등은 민주주의 문맹이 보편적인 때 나타난다. 만약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민주주의의 시각에 익숙해 있으면, 갈등이 나타날 리가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친구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에만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어색한 것도 아니며, 친구간에 의리가 상할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개념상 전형적인 문맹과 부분적 문맹의 중간단계에 있으면서, 민주주의의 제도에서 핵심이 되는 선거를 하기 때문에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민

주주의 문맹을 자각하거나 인정하려들지 않는 데 있다. 언어의 문맹자처럼 민주주의 문맹을 자각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면, 민주주의 문맹의 퇴치는 비교적 쉬울 수 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도 높고 거론도 많이 있지만, 그에 비하여 민주화의 속도는 느리며, 민주화를 혼란이나 무질서로 여기는 경우까지 생기는 것이다. 더구나 민주주의에 대하여 열망하고 거론하는 사람들은 자칫 그 자체로써 민주주의 문맹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없다는 착각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는 부분적 문맹이나 실천적 문맹의 상태에 처해 있는 데도 말이다. 우리의 민주화의 진전에 있어, 그리고 민주주의 문맹 퇴치를 위한 노력을 하는데 있어 바로 이점이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III. 청소년의 민주주의 문맹 현상

1. 분석 방법

학문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은 바로 사실의 객관적인 입증일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의 설득력은 바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문맹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객관적인 입증은 함에 있어 가장 먼저 닦치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냐에 대한 과학 철학적 입장이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과학 철학적 입장에 관한 구체적인 논쟁보다는 이글에

서 객관적인 입증을 하는 여러가지 방법 가운데에서, 상호작용 분석 방법을 택하게 된 까닭을 간략하게 밝히는 것으로써, 관련되는 논의를 한정지으려 한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주주의 문맹의 개념은 아직 정련의 정도가 낮다. 따라서 이를 실증주의의 입장에서 시도하는 바와 같은 객관적인 척도를 형성하기까지에는 좀더 많은 분석과 비판을 필요로 한다. 바로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문맹으로 분류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제시는 매우 중요하다. 좀더 많은 구체적인 행위가 제시되고 분석되어야 비로소 개념의 경계가 명쾌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의 제시는 또한 상황속에서 제시되지 않으면 의미 공유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모든 사회적 행위는 특정한 맥락을 벗어나게 되면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글에서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그 문맹 현상을 입증하려 한다. 즉,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일을 처리하며, 갈등하기도 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관찰과 면접을 통하여 유형화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택하려 한다.⁶⁾ 이렇게 입증된 내용이 간주관적으로 이해되어 개념적 의미가 공유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지는 않다. 말하자면 객관성을 간주관적인 이해로서 여기는 해석학적 입장을 염두에 두면서 이 접근법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⁷⁾

6) 이와 같은 상호작용 분석 방법은 최현섭, "학교의 도덕 사회와 과정에 관한 상호작용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청구 논문, 1985, pp.59-99 참조.

7) 과학철학적 논쟁에 관한 설명은 이상철, "이해", 역사철학연구, 종로서적, 1987, pp.273-302, 차인석, "사회과학의 과학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사회과학의 철학, 민음사, 1980 참조.

2. 청소년의 민주주의 문맹

주지하다시피, 청소년기는 성인기에 비하여 학습의 효율성이 훨씬 높으며, 학습결과와 지속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민주주의 문맹 퇴치는 성인기의 그것보다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그들이 마련하는 각종의 제도와 그 운영이 보다 더 민주주의 원리에 더욱 가까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청소년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유치원 때부터 민주주의의 이념적, 또는 절차적 원리에 대하여 학습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의 사회과목에서는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훌륭한 민주시민의 양성’을 가장 중요한 교육목표로 하여 왔다.⁸⁾ 그리하여 세계사 과목을 통하여는 서구의 시민 혁명 과정과 인권 선언의 배경,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 관하여 상세하게 공부하고 있다. 또한 사회과목과 도덕·윤리과목에서는 민주주의가 인간 존엄, 자유, 평등을 근본 이념으로 하며, 타인의 인격과 의사 존중, 비판과 타협, 설득과 합의 등을 생활 원리로 하는 이념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다. 나아가,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기 때문에 모든 의사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 다양한 의사와 욕구, 그리고 이익을 가진 개인과 집단이 공존하기 위하여 공정성이 가장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것도 배우고 있다. 또한 민주주

의에서는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반드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얻는 주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 따라서, 통치권자나 지도자의 자의적인 판단과 행동은 반민주적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저항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공부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원리와 사상, 그리고 전통 문화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가르치고 있다. 교육과정 원리상 이와 같은 가르침은 단지 민주주의 원리나 사상적 배경, 민주적 가치와 태도에 대한 이해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그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학교 생활, 또는 친구 관계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태도가 실천의 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적어도 의무 교육만을 받기만 하였어도, 민주주의 문맹 상태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여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분별하고 선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명실상부하게 지니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 이들은 공식적인 회의에서 공적인 문제에 대한 자기 의사를 표명하려 하지 않으며, 체계적인 주장을 통하여 의사를 관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근거는 특히 교사가 지켜보지 않는 학급회의 모습에서 쉽게 포착될 수 있다. 학생끼리만 하는 학급회의에서 어떤 학생이 자율 학습 시간에 친구를 위하

8) 제 4차 교육과정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마련된 유치원 교육과정의 사회성 발달 교육목표를 보면, “민주국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문교부, 유치원 교육과정, 1982, p.11). 또한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초중등학교의 사회과목의 교육 목표가 훌륭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있다는 것은 거의 상식으로 되어 있다.

여 다같이 조용히 하자'는 주장을 차근 차근 얘기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는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곧 바로 잘났다는 비아냥과 네가 뭐냐는 힐난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중학교 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더욱 뚜렷하다. 중학교의 경우는 학급에 따라, 또는 개인에 따라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생도 있고, 학교 주변의 잡상인을 이용하지 말자거나 교통질서를 지키자고 말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토의 주제로 제시하여준 내용을 반장이 말해주는 것이 고작이다. 반장에 따라 좀 상세한 설명을 하거나 규범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외레히 “알았어!”, “빨리 끝내!”하는 소리가 앞을 가로 막는다. 이와 같이 교사가 지켜보지 않는 학급회의의 관찰단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공식적인 문제나 규범적인 문제를 발언하는 것은 금기처럼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교사가 지켜보는 학급회의는 좀 색다른 면이 있는가? 적어도 우리의 관찰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으려 하며, 주간 생활 목표에 대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교사의 지적을 받은 학생이 어색하게 몇마디 하는 정도이다. 이때에도,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결국에는 식수를 오염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를 설득하려 하기 보다는 웅변조로 그냥 지꺼리듯이 말해버리는 정도이다. 그러한 말을 듣는 학생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멀다든가 쓰레기 처리장의 불결 상태 등에 관한 지적을 하려들지 않는다. 그말에 긍정을 하거나 부정을 하기 보다는 그저 “와”하는 탄성으로 화답하여 더 이상의 논의 전개를

가로 막는 것이 일쑤이다.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고려타분하다는 반응이다.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함께 공감하고 좀더 실천적인 대안을 찾으려 하거나, 자성을 하려는 기색은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교사가 지적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발언하는 학생은 극히 드물고, 지적을 받으면 앞에 말한 학생과 같다고 말하고 그냥 앉는 것이 상례이다. 그리고는 교사가 말해주는 환경 보호 문제를 그냥 듣다가 “알았어?” 하는 물음에 “예!”하며 큰소리로 대답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할 일이 끝났듯한 태도를 보일 뿐이다. 특이한 것은 교사가 함께 하였던 아니건 간에 학생들은 다른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지적이고, 그에 대한 비난이 아닌 것이 분명하여도, 그같은 지적은 인격 모독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금방 싸움으로 이어지거나 원수처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청소년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규범적인 문제에 대한 발언이나 주장을 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다. 특히 친구와 타인, 교사, 또는 학교에서 발견되는 각종의 문제를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청소년의 태도는 민주적 문맹이 아닐 수 없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실천적 문맹 상태이다. 이는 그들에게 민주주의 원리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비판적 분석 능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거의 모든 학생이 그런 것쯤은 익히 알고 있다는 표정을 보이며,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있음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실제로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에서 민주주의 원리와 가치, 태도에 대한 문제를 틀리는 학생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청소년들은 수업시간에 배운 민주주의 원리가 학급 친구들 사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그러려는 노력을 하려들지 않는 경향이다. 그래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학생도 발견하기 어렵고, 그러려는 학생이 있으면 이내 또래·잡단 문화의 제재를 받고 있다. 더구나, 교사와 학교에서 발견되는 권위적인 결정과 지시를 비판하기보다는 수용하거나 순응하는데 익숙해 있다. 비판을 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더구나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전방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태도가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한 일인가를 물으면 이내 얼굴을 붉히거나 머리를 긁으면서 “그렇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가 무엇인가를 알고는 있지만,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그 원리에 따라 실천을 하지는 못하는 민주주의 실천 문맹 상태라 할 수 있다. 특히 민주시민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기 주장과 비판적 분석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의 근본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다.

한편, 우리의 청소년들은 민주시민성에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가치와 태도인 자신들이 공동체의 실질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는 의식과 태도가 부족하다. 이는 1988년 서울시내 J고등

학교에서 교복을 입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인 학생들의 다음과 같은 반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⁹⁾

첫째로, 교복을 입자는 결정이 교직원 회의에서 결정하고나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열린 학생 간부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의사결정의 절차상의 문제에 관하여 이의를 다는 학생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다. 즉, 학급 담임이 교직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을 알리고 교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에 관한 교사들의 견해를 설명하고 난후 의견을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관심은 언제부터 입어야 하느냐, 모양은 어떠하냐에 집중되고 있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학교와 학생들을 위하여 결정한 것이며, 좋은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당사자인 학생의 견해를 참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둘째로, 그같은 결정이 통과되는데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은 새로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되는 사실이었다는 점이다. 자신들은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되지만 후배들은 입어야 한다는 발상이 너무나 간단하게 학교의 결정에 동의해주는 기준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어느덧 학생들은 의사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간단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학교의 입장에서 서고 있는 모습이었다.

셋째로, 학생들의 토론에서 의사 결정의 주체로서의 역할 인식이 부족하였다. 교사가 결정하였으나 좀 불만이 있어도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 수 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이 지배적이다. 또한 자신들의 견해와 주장을 펼치기 보다

9) 이같은 사실은 당시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5인과 교사2인의 면담 및 학급회의의 참관을 통하여 얻은 자료이다.

는 교사들의 설명가운데 남득이 가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정도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각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인 2명의 대표 약 60명 가운데에서 발언을 하는 학생은 7명 정도이고 나머지의 회의 진행 결과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회의가 끝난 직후 상당 수의 학생들이 “자기들 마음대로야”하는 불평을 수근대는 모습이였다.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발언하지 그랬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말해봤자지요, 뭐!”하면서 의사 결정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한 부끄러움보다는 학교 분위기 때문으로 돌려서는 태도를 보였다.

넷째는 회의의 분위기가 결정을 반복하거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제안하기보다는, 각 학급에 가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며, 설득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모습이였다라는 점이다. 학급의 대표들의 역할이 학급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이며,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부족한 듯하였다.

다음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은 의사 결정의 절차, 참여자의 의무, 다수결 원칙의 의미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실천 능력이 부족한 모습이다. 우선 공식적인 회의에서 보면, 하향식 결정에 익숙해 있는 모습이다. 교무회의나 담임 선생님께서 정해진 것을 수동적으로 듣고 따르면 된다는 식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토론이 필요한 문제가 제기되어도 발언하는 학생이 한정되어 있다. 토론과정에서 상반되는 의견이 개진된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하여 설득하려 하기 보다는 그냥 지켜리는 것 처럼 발언하는가 하면,

다른 학생들은 그러한 발언에 귀를 기울이지 하지도 않는다. 어떤 점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는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서로 검토하기 보다는 공중에 화살이 나르듯이 말들이 여기 저기에서 오고 갈 뿐이다. 게다가, 그러한 논쟁이 조금만 길어지면 학생들은 금방 다수결로 정하자며, 손들고 결정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때는 반장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결정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그렇게 하여 ‘학급을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쉬는 시간마다 청소를 하자’는 결정을 하였지만, 그 결정이 자기 자신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압력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는 듯하다. 결정이 있고난 직후인데도 그 결정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의 수는 많지 않으며, 다음 학급회의에서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드물다. 있다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불특정한 다른 학생들에 대한 비난을 하는 정도이다. 설령 교사의 유도로 반성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학급 청결에 대한 관심이나 언급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고, 이번주 결정 사항인 ‘쉬는 시간 5분 아끼기’만이 입에 오르내린다. 자신들의 삶에 관한 결정이라는 생각보다는 학급회의가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지배하는 듯하다.

이에 비하여 몇몇 친한 친구들 사이의 결정에서도 논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주말에 산에 놀러가기로 하는 문제와 같이 다같이 참여하여야 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개개인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고 다짐을 받고 있다.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집단 리더에게 결정권을 위임하는 경향이며, 결정된 것을 지키지 않는 학생이나 행동에 대하여는 반드시 잡고 넘어가는 편이다. 개인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기

보다는 철저하게 다같이 하며 똑같이 한다는 통일 원칙이 적용되며, 결정된 것을 어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적 관계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이 적용되는 경우는 의견이 다수일 때,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을 의미할 뿐 각자의 견해 차이가 있다던가, 개인적인 이해 관계의 차이를 용인한다는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인가 꼬치 꼬치 묻고 따지는 학생은 집단적인 교유 관계를 영위하기 어렵다. 특히 공동의 경비를 어떻게 썼느냐를 따지는 것은 친구를 불신하는 행위로서 금기시 되어 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를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설득조로 얘기하기보다는 애원이나 선동조의 발언이 아니면 비난을 받기가 쉽다.

이상과 같은 학생들의 행동은 실천적인 민주주의 문맹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천적인 민주주의 문맹은 그 실천에 필수 불가결한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가 함양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민주주의 원리인 인간 존엄성이라든가 토론과 타협 등은, 자기 존중과 주장, 타인 고려와 공정성의 추구를 수반하지 않는 자기 존중과 주장은 민주적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공정한 절차와 방식을 세워나가는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비판적 분석과 개방적 수용, 총체적 인식과 공동체 목적성의 견지와 같은 능력과 태도를 기반으로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모자랄지도 모르며, 지나치게 자기 입장만을 고려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바로 그와 같은 자기의 이익과 의사를 중시하고 스스로 관철하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마찬가지로 비록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와 같은 자기 이익과 의사를 공개적

으로 표명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적인 기반이다. 이를 바탕으로 타인도 자기 존중과 주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공정하게 각자의 존중과 주장을 관철하는 절차와 방식을 세워나가려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 고려와 공정성의 추구를 수반하지 않는 자기 존중과 주장은 민주적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공정한 절차와 방식을 세워나가는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비판적 분석과 개방적 수용, 총체적 인식과 목적성의 견지인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능력과 태도가 바탕을 이루지 않는 토론과 타협, 다수결의 원리와 같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리는 오히려 비민주적일 수도 있다.

앞서 살펴본 학생들의 태도는 바로 이와 같은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의 문맹 상태를 보여주는 근거이다. 특히 자기 존중과 주장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고, 있어도 타인의 고려와 공정성의 추구를 수반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판적인 분석은 인식 공격과 혼동하고 있다든가, 학급이나 학교, 또는 학생이라는 공동체의 목적성을 견지하기 보다는 지엽적이고 개인적인 목적을 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르고 있지만 비판적인 분석과 개방적인 수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의사 결정을 하였지만 그것을 자발적, 지속적으로 관철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기초 능력과 태도의 부족을 읽을 수 있다.

학교에서 학급회의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민주주의 기초를 터득하게 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체험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급회의가 그같은 목적에 충실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문제이다. 여기에서 또다시 민주주의는 열망하고 거론도 하지만, 민주주의 구현에 필수적인 민주주의 문맹퇴치에는 관심도 적고 투자도 소홀히 하는 한국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무감각과 무책임성을 읽을 수 있다. 민주화의 진전에서 청소년기의 교육이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라든가 학생들 자체가 잘 따라 주지도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만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사의 책임이 면제 되지는 않는다. 또한 민주화를 착실하게 추진하려 하여도 일부 철저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실제로 민주화든 한꺼번에 이룩되든 것이 아니마든 말로, 민주화되 확고한 기반이 되는 민주주의 문맹퇴치를 위한 노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런데 청소년의 민주주의 문맹은 성인들과는 성격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비록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이거나 실천적인 문맹 상태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를 이념형으로 하는 사회에서 자라났다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차이이다. 다음으로 경험의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고, 영향의 범위가 비교적 좁은 행위만을 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변천되고 다원적인 속성을 지닌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그만큼 깊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성인들의 실천적 문맹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조그마한 노력을 통하여 민주주의 원리의 실천 능력을 기를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청소년들은 민주주의 원리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와 태도에 대한 문맹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인간 존엄의 기초가 되는 자기 존중 의식과 그 관철 의지와 능력이 지나치게 부족한가하면, 반대로 타인 고려 정신이 거의 발

달되어 있지 못하는 등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의 공동체 생활은 전체주의적인 색채가 짙거나 폐거리 중심의 분파적 활동이 지배적인 경향을 보이게 된다.

IV. 민주주의 문맹 퇴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1. 지금까지의 민주시민교육의 문제

민주주의 문맹은 민주화를 왜곡시키거나 심지어는 반민주적인 의식의 확산에 기여할 수가 있다. 한국의 지속적이고 학교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민주주의 문맹을 퇴치하는 일이 필수적인 동시에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여왔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민주시민교육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거나 불안정하였다. 이같은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불안정은 크게 세가지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지어 나타났다. 하나는 민족 분단이후 심화된 남북간의 이데올로기 대립과 적대관계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집권 세력의 정당성의 결여와 카리스마적 지배이다. 여기에도 가부장적 전통이 결합되어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의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 해방이후 강조되던 민주주의 교육이 반공교육으로 대체되고, 민주주의 본래적인 성격보다는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강조하였던 역사가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분단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상적인 연구나 논의가 제한되었다든가, 주장과 요구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가르쳤던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근거는 한국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의 변천에 관한 R. H. Cole(1975)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심지어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 조차도 선별하여 가르치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둘째는 민주시민교육의 체제와 과정에서 체계성이 부족하고,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체계성이 부족하였다는 말은 유치원으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민주시민교육이 기관간 또는 내용간에 통일된 연계성을 보이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취학 이전 아동이나 성인기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해서는 거의 관심도 없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 TV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민주시민교육의 시각에서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성인의 민주시민교육에는 최근들어 지방자치위원의 민주주의 문맹 현상이 부각되자 관심이 나타나는 정도이다.

한편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말은 그동안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진 민주시민교육이 경과된 시간에 비하여 지식의 전달 수준을 넘어서 실천적 수준에까지 도달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이 강조되는 것에 비하면, 의외로 경험조직에 필요한 자료와 방법의 개발이 저조한 편이고, 그나마 한국의 교육 현장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던데 기인된다. 이밖에도 학습의 크기가 통제의 범위를 훨씬 벗어날 정도로 많고, 행동 분석실, 자료실, 세미나실과 토론실과 같은 보조 시설이 거의 구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¹⁰⁾ 앞서 살펴본 학급회의의 민주시민교육적인 의의에 대한 인식이 퇴조하였든가, 민주주의 문맹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교사가 많이 있다는 점도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끝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부족하였고, 그 축적된 전문성을 존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일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며, 복잡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상, 그리고 개념적 의미가 역사적인 변천을 거쳐왔으며, 제도적 특성도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 단계에서는 총체적인 분석과 도덕적인 의무감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민주시민교육을 하였다고 하여도 자칫하면, 부분적 문맹 상태에만 머물게 할 수도 있으며, 실천적 문맹인을 기를 수도 있다. 더구나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상은 추상적이고 이념적이기 때문에 고도의 분석력을 기르지 못하면, 구체적인 적용 단계에서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면밀한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한 민주시민교육은 그만큼 민주주의 문맹을 가중시킬 수 있다. 사실 민주시민교육을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민주주의 문맹상태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요인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필수 불가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연구는 아직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10) 최현섭, "학교교육을 통한 민주주의 가치관과 태도의 생활화", 미래의 한국과 세계 1권 3호, 한국미래연구학회, 1991, pp. 45-47

상태에서 이루어진 민주시민교육이 효율적이기를 기대한다는 잘못된 일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민주주의 문맹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며, 전문적인 안목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나 아니나를 구별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영향력이 비교적 큰 유치원 교사, TV 프로그램 제작진과 자문 위원 등이 민주주의 전문성 고양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2. 몇가지 제언

이와 같은 민주시민교육의 문제를 극복하여, 민주주의 문맹을 확고하게 퇴치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요청되는가?

첫째로,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주주의 문맹 상태에 관한 면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문맹인가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스스로를 문맹자라고 인정하도록 하고, 사회적으로는 문맹퇴치의 필요성과 의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민주주의 문맹 퇴치를 위하여 아무리 좋은 방안을 수립한다 하여도, 자신들의 문맹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실천적 문맹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문맹의 자각의 정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이들에 대한 문맹 퇴치가 더 중요한 까닭은 전형적인 민주주의 문맹 상태나 부분적인 문맹 상태에 있는 사람들 보다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위치를 차지하는 경

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 문맹의 개념과 종류를 명료화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상, 그리고 민주적인 제도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민주주의 문맹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만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한 아이디어나 열정만으로 이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과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이룩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설치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위원회와 같은 기구말이다. 그럼으로써만 지속적이고 안정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구를 만들 때 유의하여야 하는 것은 연구를 우선시 하는 사람이나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에 의하여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까닭은 지금까지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던 기구들이, 유명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사업의 추진을 고려한 나머지, 그 분야에 관하여 연구 한번 안한 사람들에게 운영의 책임을 맡김으로써,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낭비를 하였던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하여 만드는 기구가 그렇게 된다면 민주주의 문맹을 가속화시키는 기구로 변질되어 만들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기구는 설령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한이 있어도, 철저히 중립적인 기구

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처럼 당장에 효과를 나타내는 일에 매달림으로써, 본말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 기구에 최근에 증가되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 집단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철저하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상에 근거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는 기구가 아니고는 기구 설립의 의의가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 기획에 청소년의 민주시민성 훈련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일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일반 프로그램과 국가사회의 지도층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민주적 지도자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실천적인 원리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을 시킴으로써, 인지적 교육에 머물고 있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그 목표를 완성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용하는데 유의하여야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그랬듯이 강제적으로 이수토록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좋은 것은 강제를 하여도 좋다는 논리를 자주 듣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문맹 퇴치를 위하여 비민주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정은 이수하였어도 여전히 문맹 상태로 남아 있는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 이같은 과정의 운영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법이어서는 안된다. 주변에 있는

문제를 민주주의의 시각으로 분석해 보고, 문제의 성격과 해결 방안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보는 철저한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선거시에 돈봉투를 주고 받는다든가 선심 행정이 나타난다든가 하는 문제로부터, 지역 개발에는 소홀히 하지만 국민 전체에 관련되는 정책에는 적극적인 국회의원에 대한 지역구 주민들의 평가의 타당성,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당한 사람, 그리고 경찰관의 입장 차이에 관한 분석 등 생활에 직결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토론을 벌이거나 역할극을 해보도록 할 수도 있다. 또는 자기 지역 행정 담당자와 함께 불편 사항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한다든가, 이해득실이 상반되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공정하게 평가해보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추상적인 원리가 구체적인 생활에 적용돼 나타나는 마찰과 변질 가능성을 통찰해보도록 함으로써, 부분적인 민주주의 문맹을 퇴치하게 하고,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실천하지 못한 것을 반성적으로 재조명하게 함으로써, 실천적 문맹을 퇴치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기 존중과 주장, 타인 고려와 공정성의 추구, 비판적 분석과 개방적 수용, 총체적 인식과 목적성의 전지와 같은 민주주의 실천에서 기초가 되는 부분에 익숙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 지도자 과정에 민주시민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야 한다. 최근 청소년 연맹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도자 과정의 교육과정에는 국가 사회의 이념적 지향의 문제는 거의 취급되지 않는다.¹¹⁾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

11)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지도자 연수교재, 1992

년의 이해나 지도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문맹 상태는 청소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지도층, 국민 일반에게 만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¹²⁾ 따라서, 청소년의 민주주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청소년 지도자들의 민주주의 문맹 퇴치이다.

끝으로, 민주주의 문맹 퇴치에 가장 장애가 되고 있는 문화적 습성과 사회 구조를 꿰뚫어 보는 능력과 태도를 배양하는 일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청소년의 민주주의 문맹 상태의 상당 부분은 우리의 문화적인 습성과 사회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실 우리의 민주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갈등과 혼란을 두려워 하고, 개별성과 다원성, 그리고 역사적인 축적을 바탕으로 하는 개혁성보다도, 전체성과 통일성, 그리고 현상태 유지든가 아니면 일거

적인 일신 중의 하나를 더 중시하는 문화적 습성이다. 또한 시장의 상인들처럼 정서적 권력이라는 상품의 획득을 위하여 투표자의 환심을 사려하거나 적당히 속이려 할 수도 있고, 권력 집단끼리 야합도 할 수 있는 정치 시장의 원리, 공정 관계보다도 사적 관계가 우선시 된다는 것, 실질보다도 형식과 명분을 중시하는 것과 같은 구조적인 특성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민주주의 가치와 사상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이 함양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민주주의의 실천적 문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때, 그들 자신들의 일상 생활을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성인이 된 후에도 민주주의를 도덕적 판단과 실천적 원리 받아들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R. F. Butts, *Civic Mission in Educational Reform*, Hoover Institution Press, 1989 M.
S. Branson, *The Social and Civic Attitudes, Beliefs and Values of American Youth*, ERIC ED 306 176, 1988
E. D. Jr. Hirsh,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s Needs to Know*, Houghton, 1987
H. S. Choi, "Cultivation of Democratic Values and Attitude through Social Education", Presented Paper on 12th World Conference of World Futures Studies Federation, 1991
D. Held(이정식역), *민주주의의 모델*, 인간사랑, 1990
J. Torney et. als, *Civic Education in Ten Countries*, John Wiley & Sons, 1975 Peter du-Sautory, *The Planning and Organization of adult Literacy, Programms in Africa*, UNESCO, 1966

12) 최현섭, "한국인의 민주주의 문맹 현상과 민주시민교육", 앞의 글, (1991).

- R. H. Cole, *The Koreanization of Elementary Citizenship Education in South Korea: 1948-1974*, Doctoral Dissertation of Arizona State University, 1975
- UNESCO, *World Illiteracy at Mil-Century*, 1957
- 김경동(1983), 현대사회학의 쟁점, 법문사
- 교육부(1988-1990),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편(1986), 한국 사회의 변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극찬 편(1985),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 법문사
- 이상철(1987), “이해”, 역사철학 연구, 종로서적
- 이종렬(1986), 한국청소년의 정치사회화의 불연속성에 관한 연구
- 차인석(1980), “사회과학의 과학론”, 한국사회과학 연구소편, 사회과학의 철학, 민음사
- 최재석(1989),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 최현섭, “학교 교육을 통한 민주주의 가치관과 태도의 생활화”, 한국 미래연구학회, 한국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국 대학 책임 교수 세미나 발표집, 57-73
- 최현섭, “민주복지국가의 확립과 민주시민교육”, 청악 이영기 박사 정년 기념 논문집, 401-419
- 최현섭(1985), 학교의 도덕사회화에 관한 상호작용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현섭(1991), “한국인의 민주주의 문맹 현상과 민주시민교육”, 한국미래 연구학회, pp51-77
- 한국청소년연맹(1992), 청소년 지도자 연수교재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편(1991), 한국사회의 변화와 문제, 법문사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편(1986), 한국사회의 변화와 문제, 법문사
- 한만길(1989), “1905년대 민주주의 교육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한국교육문제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회편, 푸른나무
- 한충효외(1990), “한국대학생의 정치 사회 의식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논문집 제30집.